

# AI, 승객 많은곳에 택시 부른다

**서울시-한국스마트카드 AI시스템 전체 서울택시에 적용 수요예측 정확도 97.2% 달해 “택시부족지역 불편해소 기대”**

서울 택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 AI 시스템은 택시 수요를 예측해 승객이 많은 곳에 택시 기사를 불러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서울 택시에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AI 택시는 서울을 100m x 100m 단위의 구역으로 구분해 택시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예상 수요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택시 결제 단말기에 표출해 기사가 승객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AI 택시시스템은 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통해 얻어지는 택시 승하차 이력 데이터에 기상, 인구통계, 상권, 대중교통 정보 등 택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더해 정확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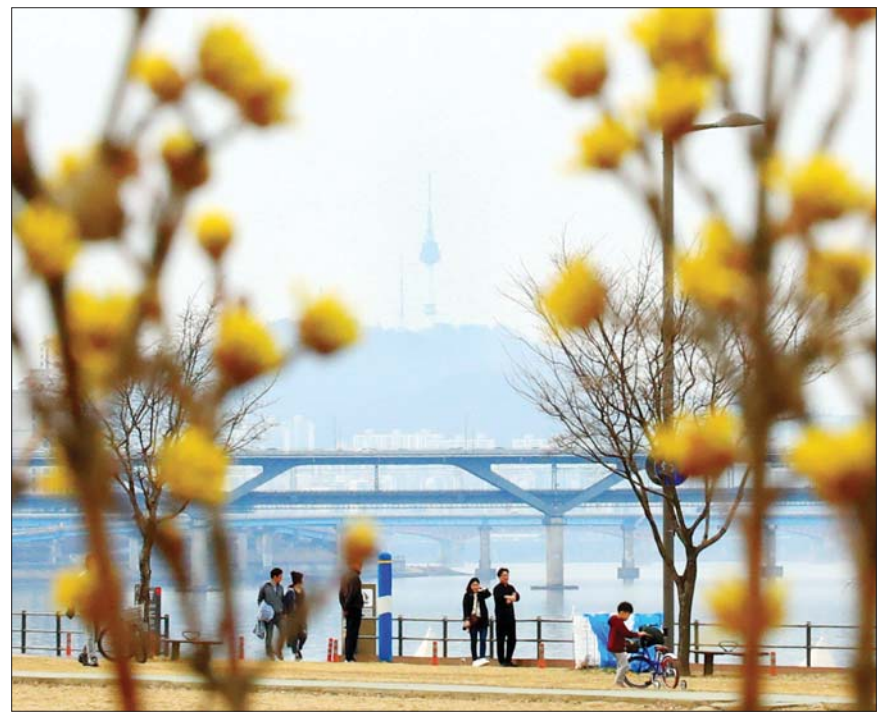
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택시 승하차 이력 빅데이터 약 2억 건을 분석해 택시 수요를 예측한 결과 약 97.2%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사 380대 택시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해 전체 택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택시회사 진화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후 1인당 영업 건수가 하루평균 20.9건에서 25.3건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AI 택시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택시운행 방식을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며 “수요는 많지만,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 택시 공급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휴일, 서울의 봄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진 10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 잠실지구에 핀 산수유 꽃 너머로 시민들이 강변 산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 안전위협 ‘울통불통’ 불량도로 재시공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진행 합동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서울시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로굴착복구 품질 강화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종합개선 대책은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강화 ▲기금 안정화 ▲시스템 개편 ▲업무 처리 제도 개선의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시는 도로굴착복구의 품질 개선을 위해 관리청 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자 복구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복구 주체에 따라 원인자와 관리청 복구로 구분된다. 그동안 모든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당일굴착·당일복구’ 원칙으로 허가돼 왔다. 이러한 시간 제약 때문에 되메우기, 다짐 불량으로 인한 도로 요철이 발생해 평탄성이 저하되고 균열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전체 도로에서 최근 5년간 진행된 도로굴착복구 공사 건수는 21만 7480건에 달한다. 연도별 공사 건수는 2014년 3만9348건, 2015년 3만9483건, 2016년 4만4033건, 2017년 4만6636건, 2018년 4만798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만3000건의 크고 작은 도로굴착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 2014년 1월 다짐장비(콤비롤러)의 규모에 맞게 최소 굴착 폭을 기존 0.7m에서 1.2m로 조정했으나 사업자가 관행대로 시공해 효과가 미비했다. 2017년에는 책임감리원을 16명에서 24명으로 늘렸지만 한 명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도로굴착복구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포장 품질이 불량한 현장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도로굴착복구 기금 안정화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선납 확대 및 단가 조정,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한

다.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굴착 행위 시행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 예치금은 2014년 158억원에서 2018년 132억원으로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인자부담금 체납액은 7억원에서 19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체납은 원인자부담금 후납 징수 시 연체료가 없는 공공기관(상, 하수도)에서 주로 발생했다. 시는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을 확대해 체납 발생 소지를 제거한다. 단, 누수와 공동복구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굴착복구 공사는 ‘선납부 후허가’ 원칙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시는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한다. 또 설계변경 상한율을 30%로 제한하고, 관련 도로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로굴착복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평탄성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 품질을 강화하고, 도로굴착복구 기금 수입원인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해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 비영리·소상공인 ‘희망광고’ 무료 지원

서울시, 내일부터 한달간 소재 공모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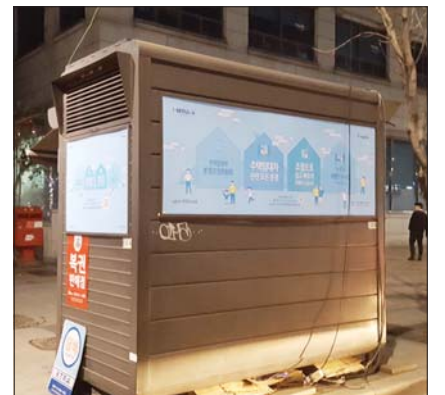
희망광고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로 광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이다.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됐던 단체나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소재는 기부·나눔·자원봉사 활동,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 시민과 청년에게 용기를 주는 소상공인의 창업스토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제작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시가 지원하는 홍보 매체는 지하철 동차 내부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희망광고 부착 모습.

/서울시

대 등 약 6896면이다. 시정월간지 ‘서울사랑’에도 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에 희망광고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청년스타트업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서울시, 최대 7000만원 제공

서울시가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 개선금을 제공한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채용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 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



근무환경 개선 사례.

/서울시

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 인턴을 배치해 해당 직원의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매칭부터 인건비까지 시에서 모두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 중기 지원사업 설명회 서울시, 14일 등 3차례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자금유자, 유통관로, 마케팅, R&D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기업으로 처리 전담기구인 서울기업지원센터에 상담 요청과 문의가 잦은 내용과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총 3차례 진행된다.

설명회는 14일, 20일, 29일 오후 2시부터 각각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강남구 세텍, 강서구 서울유통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으로 6개 출연 기관과 1개 협회가 참여한다.

시는 설명회를 찾는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자금, 창업,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오후 2~4시 상담을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민원제출 서류 147건 없앤다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조사

경기도가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조사를 했다.

도는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를 2월 말부터 감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 7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용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국제지방세안납증명서 등 총 71건의 서류를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